

研究論文

부마항쟁과 도시하층민\*  
- ‘대중독재론’의 쟁점을 중심으로 -

김 원\*\*

I. 서론	V. 결론: 대중독재론과 도시하층민의
II. 1979년 4월 경제안정화 정책 경제위기 와 도시하층민	‘정치 <참고문헌>
III. 부마항쟁의 전개과정과 성격	<국문요약>
IV. 도시 하층민의 타자화	

I. 서론

1979년 10월 14일부터 19일 사이에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흔히 ‘부마사태’라고 부른다. 이 명칭은 긴급조치 하에서 관제언론이 주로 사용하던 용어였다. 단적인 예로 당시 신문들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 시위로 18일 0시를 기해 부산에 비상계엄령, 불순분자 경거망동 발본,”<sup>1)</sup> “폭동에 가까운 방화파괴 이틀, 현장에 사제총기 배후에 조직세력 있는 듯,”<sup>2)</sup> “복귀 부산 사태왜곡 선동, 유혈참극, 학생학살 등 날죽”<sup>3)</sup> “공공건물 파괴 등 18~19 이틀 소

\* 본 연구는 한양대 비교역사연구소 주최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2006년 4월 14일에서 발  
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토론회와 심사 과정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정치학 전공(labor2001@yahoo.co.kr).

1) 《동아일보》, 1979년 10월 18일자

2) 《동아일보》, 1979년 10월 20일자

3) 《동아일보》, 1979년 10월 22일자

요, 마산서장 회견 사제총·각목·화염병 사용”<sup>4)</sup> 등이 당시 신문보도였다.

물론 부마항쟁 이전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봉기와 도시하층민의 저항들은 존재했다. 1971년 광주대단지사건을 필두로 1970년 9월 경기도 고양군에서 무허가주택의 철거를 둘러싼 주민·경찰의 투석전, 같은 해 10월 서울 성산동 지구 200여명의 무허가 건물 철거에 반대하는 시청 앞 시위, 같은 해 11월 영등포구 내 무허가 판자촌 철거에 대항한 주민 2,000여명의 투석전 그리고 다음 해인 1971년 부평시장에서 400여명 노점상인들의 철거반대 폭동 등이 ‘감추어진 도시 폭동들’이었다. 하지만 도시봉기를 포함 유신 시기 밑으로부터 대중저항에 관한 연구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도시하층민 중심의 도시봉기에 관해서는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흡스봄의 표현을 빌자면,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연구되지 않은 ‘주변적 운동’” 가운데 하나가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도시봉기였다’<sup>5)</sup>

부산·마산에서 봉기적인 저항(이하 통칭해서 부마항쟁)은 1970년대 후반 도시하층민의 모순을 드러내는 밑으로부터의 도시봉기였다.<sup>6)</sup>

흔히 1970년대 저항운동은 재야나 지식인·학생의 민중·민주화운동이 중심으로 다뤄졌다. 부마항쟁도 마찬가지로 학생운동이나 민중운동사의 일부분으로 취급되거나, 도시봉기의 주체인 도시하층민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 지역주의적 성격, 한미갈등, 정치사회 내 균열 등 전체적인 민주화운동이라는 맥락에서 다루어져 왔다.<sup>7)</sup> 특히 항쟁에서 하층민의 주도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른바 민중주의에 대한 과도한 경도—은 학생 등의 역할을 폄하하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sup>8)</sup> 또한 운동의 지향이라는 기준으로 ‘지도부 없는 자생적 항쟁’이나 ‘자유

4) 《동아일보》, 1979년 10월 22일자

5) 흡스봄, 『원초적 반란: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유럽소외지역 민중운동의 제형태』(온누리, 1984), 19쪽

6) 부마항쟁에 대한 현재까지 축적된 자료·증언·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거역의 밤을 불사르라: 10월 부마민중항쟁사』(1985);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마항쟁 10주년 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1989);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부마항쟁』, 『1970년대 민주화 운동(IV)』(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1986); 조갑제 『有故(1) (2)』(한길사, 1991); 이수연, 「부마사태의 전모를 밝힌다」, 《신동아》, 1985년 5월호(1985).

7) 정근식, 「한국민주화와 부마항쟁」, 부마항쟁 20주년 기념사업회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1999); 손호철, 「1979년 부마항쟁의 재조명: 정치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방 60년의 한국정치』(이매진, 2006).

8) 박철규, 「5·18 민주항쟁과 부마항쟁」, 『5·18은 끝났는가』(푸른숲, 1999), 191쪽

주의적 지향의 운동' 등으로 해석되거나 우발적이며 비조직적인 투쟁으로 이해되어왔다. 예를 들어 “[부마항쟁은—인용자주 목적지향적 운동이 아니며 주도세력의 부재는 대중에게 집합행동이란 암묵적으로 공유된 목적 이외 체제혁파를 위한 ‘공유된 가치’를 주입하지 못했다”<sup>9)</sup>라든지 “인권보장, 정치제도 합리성에 치우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목표가 주도적으로 반영,” “반독재민중항쟁” 혹은 “시민 가운데 가난한 하층 시민들의 봉기, 룬펜 프롤레타리아적인 부분에 의해 이끌려진 근로대중의 봉기…그것은 본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적이라기보다는 룬펜프롤레타리아트적인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sup>10)</sup>

이들 기존 연구가 지닌 문제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먼저 이전에 운동을 주도하지 않던 도시하층민이 왜 항쟁에 대규모로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이들에게 다만 부마항쟁은 유신 후기 일련의 정치·사회적 위기의 ‘징후’로만 해석될 뿐이다. 두 번째로, 목적의식성 의식성 등 기존 사회운동에서 사용되는 준거로 항쟁을 평가하기 때문에 도시봉기의 역동적 전개 과정, 항쟁에서 드러난 정당이나 국가로 환원되는 정치와 구분되는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해석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민중주도성 혹은 도시하층민의 주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계급중심성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는 입장의 경우, 역으로 운동에서 유기적 지식인으로 여겨지는 학생이나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들은 변혁운동의 순수성 근거로 항쟁 참여 주체를 비조직 대중에 의한 투쟁으로 폄하하거나, 변혁전략이라는 기존의 고정된 프로그램 하에서 항쟁을 정형화시켜 해석하고 있다.<sup>11)</sup>

더 나아가서 상당수 연구들은 은연중에 박정희 시기 도시하층민을 일탈적이고 위험한 존재 혹은 민주화 운동의 ‘순수성’과 거리가 먼 ‘폭도’나 ‘주변화된 군중’으

9) 임현진, 「다시 보는 부마항쟁」, 『사회이론과 사회변혁』(한울 2003), 344 쪽

10)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하라. 박철규, 앞의 논문, 186~189쪽; 임현진, 위의 논문, 338, 343 쪽

11) 단적인 예를 들면, “...기존 연구들은 항쟁 초기 학생들의 일정한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구속자들의 직업 분석에 기초하여 항쟁의 민중성을 강조...민중주의에 대한 과도한 경도는 상대적으로 청년·학생들의 역할을 폄하하는 미필적 고의를 범할 수 있다. 우리는 초기 변혁운동의 집화나 확산에서는 지나친 계급중심적인 쟁점을 강조하거나 기층 민중을 핵심 주체로 설정하는 것은 올바른 변혁 전술이라 볼 수 없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류의 주장이 그것이다(박철규, 위의 논문, 191 쪽).

로 간주해 왔다. 단적으로 실제 항쟁을 심화시킨 도시하층민을 비도덕적인 개인이나 집단으로 운동사 서술에서 타자화·주변화시켜, 민주화운동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출소를 파괴 방화한 사람들 중에는 당국의 발표대로 깡패 불량배로 불리는 사람들도 간혹 섞여 있었다. 그러나 시위군중 대부분은 수출자유지역의 근로자들,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 대학생들...이들은 독재를 단대하고 민주화를 갈망하는 착하고 선량한 시민들”처럼 깡패, 불량배 등 ‘하층만 폭모, ‘학생 시민, 노동자=민주화운동’으로 사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sup>12)</sup>

이는 도시하층민에 대한 편견에 가득 찬 시각인 동시에 민주화·민중운동 담론 생산자층이 자신과 상이한, 그러나 하나의 정체성으로 통합이 불가능한 주체들을 배제·통합하려는 정치적 기획의 일부였다. 박정희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 민주노동운동과 조직노동자들의 저항, 일탈 등 체제와의 거리두기와 함께 불평등 과세 빈부격차 등 다시 말해서,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양극화, 이로 인한 사회적·문화적 박탈감 등으로 인한 불만 팽배가 도시하층민의 체제에 대한 이반을 초래했던 것이다. 따라서 부마항쟁은 ‘4·19 광주대단지-부마항쟁’이라는 도시봉기 계보로 이어지는 ‘남한 최후의 도시봉기’라고 말할 수도 있다. 부마항쟁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현상 혹은 민중·민주화운동으로 회수·수렴될 수 없는 도시하층민의 이질성과 복합성을 드러내는 도시봉기였으며, 그 투쟁 대상은 억압적·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와 부유층에 대한 공공연한 공격이었다. 이 점에서 부산과 마산에서 항쟁은 재야, 야당 그리고 학생운동 진영이 사고했던 정치와 근본적으로 상이한 ‘정치’의 양상을 보였다.<sup>13)</sup>

우선 이 글에서 사용한 ‘도시하층민’과 ‘도시봉기’가 지니는 함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도시하층민’은 말 그대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주변화·타자화 된 집단(혹은 밑바닥에 자리 잡은 사회집단)을 지칭한다. 도시하층민은 도시노동자, 도시빈민, 실업자, 도시하층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모두 포괄한다. 특히 부마항쟁의 주도세력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나 조직에 의해 조직된 조직대중이 아닌 개인과 집단을 지칭한다. 바로 ‘도시’에 거주하는 하층민이 함축하는 의미는 민중이나 대중으로 환원되지 않는 1970년대부터 나타난

12) 김하기, 『부산민주항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95 쪽

13) 기존 정치와 다른 ‘정치’의 사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글의 5장 결론을 참조

도시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현상인 동시에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공간적 분할의 경험 그리고 도시 위생학의 대상이 된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가 일상화되었지만 통일적이지 않은 이질적이고 비균질적인 사회집단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sup>14)</sup> 다음으로 도시봉기(urban riot)는 흔히 전근대 사회 농민봉기나 의적 행위와 그 궤를 달리하는, 농민운동에서 노동자운동으로 이행 농민운동→도시봉기→노동자운동)하는 과도기에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노동자운동이 발전하면 사라질 ‘운명’이라고 규정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시봉기는 노동자운동보다 조직적·이념적으로 열등한 과도기적이며 비조직적인 운동으로 간주됐다.<sup>15)</sup> 한국에서도 1960년 4·19를 제외하고 도시봉기는 대부분 정치변동의 ‘결정적 국면’에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취급되거나 혹은 지식인 엘리트에 의한 민중·민주화운동의 ‘주변부’(혹은 하위구성 요소)나 운동의 과도기적 단계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기존 인식과 달리, 이 글에서 주목하는 점은 ‘4·19-광주대단지-부마항쟁’으로 이어지는 도시봉기 ‘계보’이다. 박정희 시기 도시하층민들은 일상적으로 체제에 대한 복종과 동의에 익숙했지만, 광주대단지 사건과 부마항쟁에서 보여 지듯이 민중·민주화운동으로 환원·수렴될 수 없는 주체인 동시에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모순에서 파생된 경제위기, 도시화, 하층민의 타자화 등 개발주의가 내장하고 있는 사회관계의 내적 모순에 대해 저항했던 ‘밑으로부터의 봉기적 실천’의 주체이기도 했다.<sup>16)</sup>

14) 1960~70년대 이들에 대한 저항운동 진영의 시각은 4 장 도시하층민의 타자화 부분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15) 흡스봄도 도시봉기를 도시하층민의 직접적 행동을 통해 정치·경제적 변화를 이루려는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도시봉기(혹은 도시 폭동)가 명료한 언어로 분석하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늘 부유층에 대한 투쟁이었으며, 확고하고 지속적인 정치적·이념적 기준을 지니지 못했으며, 실업문제, 물가상등에 대한 반발로 출발해서 결국 시장 고리대금업자 세무서 등이 폭동에서 변함 없이 표적이 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논한다. 결국 흡스봄도 도시봉기를 근대 노동운동이 출현한 이후 또 다른 집단(노동자운동 등)에 그 자리를 물려주기 전까지 의식적인 방식은 아니었지만, 근대세계의 정치적 진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식의 사회운동에 대한 ‘진화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흡스봄 앞의 책 19, 135, 149 쪽

16) 도시봉기와 관련, ‘부마항쟁의 주체가 도시하층민이었다는 규정만으로 봉기라고 규정하기에는 제한적이지 않은가’를 둘러싼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글에서 부마항쟁을 도시봉기라고 규정 한 것은 기존 사회운동과 상이하고 이질적인 주체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봉기의 의제와 투쟁의 양식에서 드러난 기존 정치적 양식과 다른 정치를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 이 점이 도시봉기를 진화론적, 과도기적 운동으로 파악하는 입장과 이 글의 차이점이다. 이 글에서는 거리에서 밑으로부터 집단적이고 봉기적 실천이라는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부마항쟁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1970년대 저항운동은 민주화 운동(혹은 민중·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고, 1970년대 이후 도시하층민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봉기 역시 민중·민주화운동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도시하층민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도시봉기’를 민중·민주화운동으로 통합·수렴시켜 해석하려는 경향이 지니는 문제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부산과 마산에서 하층민에 의한 도시봉기를 통해 ‘대중독재론’과 그 ‘반론들’이 지닌 문제설정상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대중의 동의와 억압을 둘러싼 대중독재론의 문제설정은 스스로를 근대적인 인식론에 가두는 또 다른 이분법적 문제설정이다. 대중독재론에서 동의의 능동적인 주체로 상정하는 대중 혹은 민중은 통일적이며 균질적인 집단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이들은 매우 이질적이고 복잡적이며 비대칭적인 집단이다. 따라서 통일적 주체로서 대중과 민중이 아닌, 다시 말해서 주체성 형성을 둘러싼 ‘근대적인 문제 설정 자체를 문제시할 때 대중독재론이 스스로 제기했던 근대적 지배에 대한 비판은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sup>17)</sup> 결국 이 글에서는 부산과 마산의 도시봉기 과정에서 드러났던 민중이나 계급으로 회수불가능한 주체로서 도시하층민의 봉기적 실천을 통해 복잡적이고 이질적인 주체들이 사고하고자 했던 ‘정치를 불러냄으로써 대중독재론과 그 반론들이 지닌 설명을 문제시하고자 한다.

## II. 1979년 4월, 경제안정화 정책: 경제위기와 도시하층민

흔히 부마항쟁의 원인과 관련, 한미갈등, 1978년 총선에서 야당의 실질적인 승리, 민중운동 활성화 등 정치적 배경이나 항쟁 직전의 경제위기가 주로 언급되곤 한다. 당시 부산시경은 「79부마사태의 분석」이란 문건에서<sup>2</sup> 가지로 나누어 항쟁의

---

도시봉기와 항쟁을 번갈아서 사용했다.

17) 여기서 근대적인 문제 설정이란 민족, 민중, 대중, 시민, 남성 등 특정한 주체를 보편적이고 계몽적이며 합리적인 통합적 대상으로 ‘전제’하는 인식론을 총칭한다. 이런 문제설정에 근거했을 때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범주들의 한계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원문 그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 간접원인

- 서울 등 전국 대학가의 연쇄적인 소요사태 파급영향.
- 물리적 작용에 의한 부산지역대학가 소요유발의 장기억제.
  - ※ 10월 16일 직전 사태 진무.
- 문제목사 최성연과 탈락교수 김동길의 체제비판 특강(1979년 9월 YMCA).

#### ○ 직접원인

- 국립대학으로써 체제유지를 해야 한다는 전체 학생들의 잠재의식.
- 10월 15일, 유신철폐 내용의 불온유인물 배포<sup>18)</sup>

앞의 예문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시경은 부마항쟁의 원인을 학생들의 ‘유신대학’, 한마디로 데모도 못하는 대학생이라는 잠재적 의식과 서울지역 반체제 학생시위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경의 분석은 부마항쟁의 핵심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 바로 ‘왜 초기에는 학생들이 투쟁을 주도했으나 야간시위와 이튿날부터는 도시하층민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고 학생들의 참여는 거의 부재 했는가’에 대해서도 답해주고 있지 못하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부산, 마산 양 지역에서는 첫날 야간시위부터 시위주동자는 이른바 ‘유격대’라 불리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고, 증언자들에 말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17일까지 끝까지 투쟁한 사람들은 서비스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룸펜, 빈민, 노동자”였고, 마산의 경우에도 “앞장 서서 시위대열을 이끈 것은 깡패들이었다. 항쟁의 지도자는 그들 이었다<sup>19)</sup>” 그렇다면 왜 도시하층민들이 도시봉기의 주도세력이 됐는가와 관련, 1979년 당시 사회적 모순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970년대 말 한국경제는 자본축적의 내적 모순이 제2차 오일쇼크라는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위기와 결합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과잉증복투자는 한국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몰고 갔고, 결국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과 함께

18)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마항쟁 10주년 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1989), 71쪽. 이하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증언자: 『자료집』, 쪽수 만 명기

19) 김정호·주대환 증언: 『자료집』, 123, 212쪽

1979년 4월 긴축 등을 골자로 한 ‘경제안정화정책’ 즉, 한국 최초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는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축소와 경제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이는 독점자본 분파의 반발로 실패하게 된다. 대신 국가는 정치·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봉급생활자, 도시 노동자와 농민 등에게 안정화 비용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같은 안정화정책은 경제위기로 경영난에 빠졌던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더욱 부채질하여 기업의 부도율이 사상최고치로 치솟고 가뜩이나 어려운 도시하층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아래 같은 가격 인상, 휴·폐업과 실업자 증가, 해외자본 투자 철수, 실업자 대책 도시하층민에 대한 보호책 등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 표명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잠시 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sup>20)</sup>

- “신민당, 정부의 기습적인 가격인상(연탄, 교통요금 등—인용자주)은 서민 대중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는 성명 발표”(1979년 4월 16일)
- “박대통령,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 노사협조로 난관을 극복하자, 소득이 낮은 일반 서민의 부담을 경감시켜라, 더 이상의 중화학공업 분야의 투자조정을 없다고 언명”(1979년 7월 12일)
- “상공업, 구로·구미 등 직할공단의 746개 가동업체 중 휴·폐업이 급년 들어 24개사에 달하고 업종별로는 섬유, 전자 부품, 가방제조업이 대부분이라고 발표”(1979년 7월 20일)
- “경기부양 서두르는 신현확 경제팀, 불황인정 실업에 눈돌려”(1979년 7월 25일)
- “실업 55만명, 작년보다 10만 늘 듯—주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1979년 7월 29일)
- “박대통령, 긴급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관성이 없으면 안되며 특히 근로자와 중소기업문제에 신경을 쓰라고 발언”(1979년 8월 24일)
- “박대통령 지시 청와대 경제각의 “경제정책 신뢰 회복토록” 원가 올라도 생필품 값 안정을. 申부총리 보고, 6월말 현재 중소기업 휴 폐업 늘어 조업

20) 《조선일보》, 1979년 7-8월 각 일자, 편집부(편), 『70년대 한국일지(청사 1984)』에서 재구성

단축도 8천 업소”(1979년 8월 25일).

특히 지역불균등발전의 결과, 중화학공업과정에서 소외받고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집중됐던 부산과 마산에서 도시봉기가 일어났던 것은 이런 사회경제적인 모순과 연관되어 있었다.<sup>21)</sup> 구체적으로 1979년 당시 부산의 산업별 생산구조는 광공업 비중이 42.1%인데 비해 전국의 경우 23.7%로 광공업취업구성비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sup>22)</sup> 특히 부산은 신발, 의류, 합판 등 영세한 자본과 낮은 수준의 기술이 결합한 저부가가치 제조업이 주를 이뤘으며, 1966년 부산 내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은 73.3%, 1975년에는 77.3%, 1980년에는 73.5%로 커다란 변동이 없었다.<sup>23)</sup> 그러나 1979년에 들어서 부산지역 경제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 부산지역 부도율은 전국의 2.4배, 서울에 3배에 달했고 수출증가율 역시 전국증가율인 18.4%에 훨씬 못 미치는 10.2%로 하락했다. 이런 연쇄부도와 실업률 증가는 사회적 양극화와 하강분해를 초래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빈민, 실업자, 도시하층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도시하층민의 증가가 초래됐다. 특히 도시하층민의 존재를 규정했던 실업과 관련, 1979년 9월 당시 24개 업체가 휴·폐업 상태였고, 그 결과 6천여 명이 실업상태였다<sup>24)</sup> 당시 부산·마산 지역적 차원에서 보고된 부도, 휴·폐업, 실업 관련 기사 가운데 “일본 닛케이신문,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반 이상이 한국에서 철수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도”(1979년 8월 4일),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공장 이전의 움직임이 급증—마산수출자유지역기업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입주업체 102개사 중에서 이미 10개 업체가 폐업 나머지 92개사 중 46개 업체가 적자경영을 이유로 동남아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할 움직임에 있음”(1979년 8월 8일), “부산 사상공단의 중소기업 77개사가 휴·폐업

21) 임혁백, 『시장, 국가, 민주주의』(나남 1994), 321~323쪽 이런 맥락에서 손호철과 윤소영은 부마항쟁을, “유신체제를 무너뜨린 민주화운동 이전에 한국 사회 최초로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운동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논의를 참조하라. 손호철, 앞의 논문; 윤소영,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개론』(공감, 2006).

22) 황한식(위음),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에 관한 연구』(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센터 1982), 133쪽.

23) 임현진, 앞의 논문, 341~342쪽; 김석준, 「부산지역의 계급구조분석 시론」, 『공동체를 위하여』(동보, 1986), 52~53쪽

24) 박철규, 앞의 논문, 179쪽

근로자 4,100여 명 실업”(1979년 8월 20일)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부총리 자문역이었던 김기환도 한 인터뷰에서, “10·26의 도화선이 된 부마사태는 박정권 경제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중화학공업에 치중하다 보니 1975~77년 섬유산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전체의 40%에서 절반으로 줄고 말았는데, 그 결과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던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터졌다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sup>25)</sup> 바로 이는 개발독재 시기 지역 불균등 발전의 결과인 동시에 경제 안정화 정책과 이에 따른 사회관계의 양극화 등 조건은 도시하층민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더불어 잠재적인 저항과 사회적 불만, 차별의 기초였다. 부산에서 도시봉기에 대거 참여했던 업소 종업원들의 구체적인 불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26)</sup>

술집, 음식점, 숙박업소 등 이들 업소의 종업원들은 그들의 주인들(업주들은 각종 단속법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을 상전처럼 만들어 모셨다고 함—인용자 주) 보다도 더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불만은 관청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관청과 업주를 포함한 사회 전체를 향한 불만이었다. 낮은 임금과 형편없는 생활환경 이상으로 그들을 사회의 불만 층으로 만든 것은 인간답지 못한 대우였다. 손님들과 업주들로부터 받는 경멸과 손찌검은 거의가 청소년들이 이들의 가슴에 원한을 심어놓기가 일쑤였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 불만과 대규모 도시하층민들의 증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마항쟁으로 이어졌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전개과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 III. 부마항쟁의 전개과정과 성격

부마항쟁은 유신체제가 김재규의 총성에 의해 붕괴되기 직전에 발생한 도시봉기였다.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로, 부산과 마산에서 초기 학생들의 주도 아래 반

25) 주태산, 『경제 못 살리면 감방 간대야: 한국의 경제부총리, 그 인물과 정책』(중앙M&B, 1998), 154쪽.

26) 조갑제, 앞의 책(1), 307 쪽

정도는 자생적이며 반 정도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시위가 어떤 과정을 통해 도시 노동자, 빈민, 실업자 등 도시하층민 주도로 변화했는지를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시위과정에서 제시된 요구, 이슈들의 성격을 당시 증언과 신문자료, 일지 등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부마항쟁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은 시위참여자들의 시위형태에 있어서 전투성·폭력 등 집단행동을 보였으며 이는 대부분 젊은 도시하층민, 실업자, 부랑자들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이다. 특히 부유층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 경찰·언론사·지방 세무서 등의 국가기관에 대한 공공연한 폭력과 방화 등은 이전에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처음부터 체계적이고 단일한 요구가 존재한 것이 아닌, 투쟁이 진행되면서 투쟁의 주도세력에 따라 그 수위가 상당히 달라졌다. 여기서는 시기별 행위자별로 주되게 제시된 이슈를 유인물, 투쟁시 제기된 요구사항 등을 통해 정리해보자

## 1. 부산

부산지역의 경우 초기 투쟁은 부산대 학생들에 의해 주도됐다. 1979년 10월 15일에 벌어진 최초의 시위는 부산대 공대의 김진걸과 서울 삼양사 노동자였던 남성철(당시 무작), 황선용(서면 서림 직원)을 한 축으로, 법대 복학생 신재식과 동료 6인을 한 축으로 해 각각 9월부터 준비됐다<sup>27)</sup> 한편 신재식을 중심으로 한 법대팀의 경우 처음부터 서면, 남포동 등 시내중심가로 진출할 목적으로 1974년 남포동 시위경험이 있는 선배 황태연에게 조언을 구하고 유인물 배포방법, 유인물의 내용과 낭독방법 그리고 조직 동원을 계획했다. 또한 “시위가 있으니까 운동화를 신고 다녀라,” “서울 이화여대에서 남자성기와 가위를 보내왔다더라<sup>28)</sup>”는 소문을 내면서 학생들 간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15일 정오 정광민은 같은 과의 전도걸, 박준식과 더불어 시위결행을 논의했고 이는 다분히 “누군가 치고 나가면 된다”는 낙관적인 생각에 근거한 것이었다<sup>29)</sup>

27) 《한겨레신문》, 1988년 10월 15일자

28) 김영 증언: 『자료집』 134쪽 이는 전국에서 가장 데모를 할 줄 모르는 유신대학이라는 별칭을 지닌 부산대학의 투쟁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겨레신문》, 1988년 10월 15일자

29) 정광민 증언: 『자료집』, 108쪽

10월 16일 부산대생 지도그룹이었던 정광민에 의해 작성된 선언문을 보면 “고도성장정책의 추진으로 빚어진 부조리와 권력층과 결탁한 재벌독점자본가의 부정 및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야기된 사회의 모순 등을 규탄…유신헌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무모한 정치욕을 충족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언문 뒤의 “폐정개혁안”에서는 “① 유신헌법 철폐 ② 안정성장정책과 공평한 소득분배, ③ 학원사찰 중지, ④ 학도호국단 폐지, ⑤ 언론·집회·결사의 완전한 자유와 보장, ⑥ YH사건에서의 같은 반윤리적 기업주의 엄단 ⑦ 전국민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중지” 등의 7개항을 제시했다.<sup>30)</sup> 한편 전도걸 등에 의해 배포된 또 다른 유인물에서는 유신헌법의 퇴진과 유신헌법의 즉각적 철폐, 대외의존·민중부문에 대한 저임금착취를 정당화하는 경제성장 정책의 수정 등을 담고 있었다. 이런 당시 대학생들의 주장은 반공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상화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국한된 것이었다.<sup>31)</sup>

다음으로 10월 16일 시위를 살펴보자. 먼저 학생들이 주도했던 단계를 보면 오후 2시 부영극장 앞에서 시위는 주로 “독재 타도, 유신 철폐 류의 슬로건과 선구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애국가 등 노래가 번갈아 불리워 졌다 3시 30분경 새부산 예식장 앞 거리시위에서 독재타도 구호가 등장했으며 학내에서 다 뿌리지 못한 「민주투쟁선언문」 200여 장이 시민들의 손에 쥐어졌다. 4시에서 5시 경에는 용두산 공원지역(4시), 제1대청과출소(4시 5분), 청산동 국민은행 앞(4시 30분), 부영극장 앞(4시 35분), 동아테파트 앞(4시 50분), 부산우체국 앞(5시 5분)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총인원은 2천 5백여 명이었고 점차 도시 룬펜 청년의 시위가담이 눈에 띄었다.<sup>32)</sup>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오후 5시 40분 언론의 취재차량이 최초로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이다. 학생, 시민들의 돌이 화살처럼 날아들었고 “뺨하러 여기 왔느냐”는 질타가 가해졌다.<sup>33)</sup>

이처럼 오후까지의 시위는 학생들에 의해 주도됐으나 야간시위에 이르자 시위대는 5만에 이르렀고 시위대에는 화이트 컬러, 노동자, 상인, 업소 종업원, 고교생

30) 『자료집』, 32-33쪽, 267쪽. 이는 동학농민전쟁시 전봉준의 “폐정개혁안”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한다.

31) 부산대에서 배포된 다음의 선언문을 참조하라. 「민주선언문」(1979년 10월 15일), 『자료집』 31쪽.

32)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앞의 책, 324-325쪽. 이 자료의 중요한 부분은 다음의 책에 부록으로 실려 있다. 조갑제, 앞의 책(1), 301-337쪽. 이 글에서는 이 책의 쪽수를 사용한다.

33)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위의 책, 325쪽.

들도 동참했다. 17일에 이르러서는 도시룸펜, 집객업소 노동자, 영세상인, 반실업 상태 자유노동자, 무직자들이 시위를 주도했다. 이것은 과연 사실인가? 이런 사실은 부산시경의 「79부마사태의 분석」이란 문건에서 확인된다. 이 보고서는 데모의 특이양상으로 “20세 전후 불량성향자 대학생 가장 합세(때미리, 식당종업원, 공원 구두닦이 등), 시민들 박수음료수 공급 등 데모학생 동조 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역시 시위주동자에 대한 분석에 근거, 10월 22일까지 무기한 폭력배 단속령을 내리고, 치안본부도 19일에서 22일 사이 전국의 우범자 4,207명을 검거하는 예비검속을 실시했다.<sup>34)</sup> 이는 시위가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의 참여가 낮아지고 도시빈민, 비조직적 도시하층민들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실제 16일 22시 항쟁에서 학생의 비율은 5퍼센트에 달하지 않았다.<sup>35)</sup> 다음으로 참여자들의 증언을 하나씩 살펴보자.

16일 4 시쯤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었습니다...시위대는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경찰이 오면 물을 뿌리는 등 시위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8시경이 되자 고등학생, 퇴근하던 노동자, 국제시장을 둘러싼 주거민 등 자발적 참여가 늘어났고 시청 앞에서 총무동은 해방공간이 돼...끝까지 투쟁한 사람들은 서비스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룸펜, 빈민, 노동자들이었고 학생들은 맨 먼저 이탈 했습니다.<sup>36)</sup>

다방 아가씨와 술집의 호스티스까지 나와 박수치고 고향지르고 세상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다.<sup>37)</sup>

일반시민들이 저렇게 체계가 잡힌 것같이 시위대를 보호해 주고 어둠이 깔리면 기층 민중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하는 정도면 유신도 박정희도 이젠 갔다고 생각 했죠.<sup>38)</sup>

34) 박철규, 앞의 논문, 190쪽

35)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앞의 책, 333쪽, 이는 17일 오전 부산진 경찰서에 연행된 31명 가운데 학생은 10명도 안되었다는 자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조갑제, 앞의 책(2), 17쪽

36) 김정호 증언, 『자료집』 122~123쪽

37) 이대우 증언, 『자료집』 128쪽

38) 최성목 증언, 『자료집』 154쪽

17일 극장 앞에서 경찰차를 뒤집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시빈민까지 모두 지지를 보내는 걸 보았습니다.<sup>39)</sup>

앞서서 시위를 주도하거나 파괴에 나섰던 사람들은 작업복 차림이거나 허름한 차림의 례펜들이 주가 아니었던가 기억됩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이 흩어져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새벽까지 남아서 투쟁의 최전선을 지킨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민중들 이었습니다.<sup>40)</sup>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은 이런 주도세력의 변화 양상이었다. 양 지역 모두 초기에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시위에 시민이 호응하는 양상을 띠었으나 투쟁이 점차 고조되고 억압적 국가기구인 경찰과 군의 투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학생들은 이탈했고 최후까지 투쟁을 주도했던 층은 구두담이, 식당 종업원, 상점종업원 등 도시하층민들이었다.<sup>41)</sup>

한편 투쟁의 양상과 관련, 16일 오후 학생 중심의 시위는 방어위주였으나 야간이 되자 시위는 점차 공격위주로 변했고 구체적인 목표물을 정하고 차례로 그것을 파괴·방화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16일 밤 시위대는 언론기관 한곳, 파출소 11곳을 공격했고,<sup>42)</sup> 야간시위에 이르러 시위대는 “독재타도, 유신철폐, 언론자유”를 계속 외쳤고, 7시에 이르러서는 5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sup>43)</sup> 특히 6시 이후에는 공권력의 상징인 도청, 경찰서, 세무서 등에 대한 방화, 공격이 이뤄졌다. 8시 40분경에는 5백여 명의 시위군중이 벽돌·돌맹이로 남포파출소를 파괴하고 뒤따라오던 순찰차, 작전차를 전소시켰다. 이런 부산에서 시위양상을 「부산지역 대학생 시위사태 발생보고서」를 통해 살펴보자.<sup>44)</sup> 16일의 1차 시위에서 부산대학생들은

39) 김영 증언, 『자료집』 136 쪽

40) 허진수 증언, 『자료집』 140 쪽

41) 박철규, 앞의 논문, 190 쪽

42) 16~17일 양일간 습격 받았던 언론 기관은 부산문화방송, 한국방송공사 부산방송국, 부산일보사였다. 이들 기관에 대한 공격은 분풀이에 기초한 것이 아닌, 유신 체제 하에서 언론 기관이 보여준 왜곡 보도 등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에 근거, 선별적인 기준에 기초한 것이라고 평가받았다. 조갑제, 앞의 책(2), 41~42 쪽

43) 10시경 시위군중들 속에서 “김영삼! 김영삼!” 연호가 튀어나왔다. 한편 기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6일 오후 6시경 처음으로 김영삼을 연호하는 구호가 시청 앞 시위에서 등장했다고 한다. 김하기, 앞의 책, 73 쪽

상오 10시 3천에서 5천명이 참가하고 7천명에서 8천명에 이르는 시민이 참가했고, 시위지역은 크게 3지역이었는데 학교주변 시내 남포·광복·창선동 등 중심가였다. 같은 날 밤 10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동아대 3백여 명이 시청에 진입하기 위해 투석전을 전개했고 이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과 난투극이 벌어졌다. 그 결과 경찰측은 65명 중경상, 남포·창선 2개 파출소 반파(半破), 경찰기동차 2개 전소, 병력동원차 2차 반파, 관광버스 1대 전파, TBC 텔레비전 차량 1대가 반파되고 학생측은 212명이 검거됐다.

다음으로 10월17일 밤에 일어난 야간시위에서 이슈를 살펴보자 「부산지역 대학생 시위사태 발생보고서」에 따르면 시위시 구호와 노래는 “독재정권 물러나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유신체제 철폐하라,” “박준규 물러가라”였고,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자유,” “애국가”였다.<sup>45)</sup> 여기서 공통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점은 첫째, 시위대에 의해 도청, 경찰서, 세무서, 방송국, 신문사 등 공공기관이 파괴됐다는 사실이다. 17일 야간에 테모대는 언론사 3곳, 경남도청과 중부세무서, 경찰서 2곳, 파출소 10군데를 공격했다.<sup>46)</sup> 둘째, 경찰의 표현대로 시위군중이 야간에 ‘유격대’ 같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주로 공공시설을 하나하나씩 파괴했다는 점이다. 10월 17일 상황을 「부산지역 대학생 시위사태 발생보고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강조는 인용자).<sup>47)</sup>

1. ① 부산시경국장 승용차(3333호) ② 2관구 사령관차 ③ 헌병 백차 2대 ④ 버스·자가용 5~6대 불타거나 반파됨 ⑤ KBS, 문화방송, 동양TV ⑥ 도청 일부파괴 당함 ⑦ 부산시내 23개 파출소 불타거나 반파됨
2. ㄱ. 1979. 10. 17 밤에는 진입차 나온 경찰차 12대 중 6대가 완전히 박살났고
  - ㄴ. 서울 某 신문사 광고국 명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차에 불을 지르려다 검거됨. 서울에서 “유격대”라고 불리는 일부 불순세력이 來釜하여 선동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음(관계 여론인지는 확인 불가).
  - ㄷ. 이들은 50~60명씩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곳을 골

44) 『자료집』, 36쪽

45) 『자료집』, 37쪽

46) 조갑제, 앞의 책(2), 41쪽

47) 『자료집』, 37쪽

**라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고 도망간다고 함.**

- 3. 1979. 10. 18. 0시를 기해 부산 일원에 계엄령이 선포돼 장갑차를 앞세운 무장군인들이 출동, 주요관공서 및 언론기관을 접수하고 계엄 상황에 들어갔으며 본부를 시경과 시청에 두고 있음.

17일 보고서가 어느 정도 사실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시경측 보고와 당시 참여자의 증언 그리고 신문보도를 교차시키면서 확인해보자. 부산시경의 「79 부마 사태의 분석」에서는 “10월 17일, 19:20~01:30 각 대학 연쇄시가지 야간데모(4백~8백 명), 10월 18일, 19:27~21:50 연쇄시가지 데모(2백~5백여 명) ※육공수부대에 의해 해산”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데모의 특이양상으로 “주야간 구분 없이 도시계열라식 폭도화, 경찰차 방화, 파출소·언론기관·관공서 등 공격”이라고 기록하고 있다.<sup>48)</sup> 부마항쟁 기념사업회 역시 17일 투쟁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충무동 방향으로 진출한 시위대는 두 갈래로 갈라져 부산역 방면과 운동장 방면으로 진출했다. 운동장 방면으로 진출해 충무파출소를 박살내고 서부경찰서, 동대신파출소 등의 유리창을 파괴...부산역 방면으로 진출한 시위대는 초량 1파출소를 습격하고 부산진역 방면으로 진출, 1천여 명으로 증강된 시위대는 동부경찰서에서 경찰과 접전...밤 9시쯤 중부세무서와 대신3동 사무소가 시위대의 습격을 받았다...시위대는 영선고개로 진출하면서 제2대청파출소를 박살내고 방범 오토바이를 불태웠다...항쟁은 1시 30분까지 이어졌다. 모두 21개의 파출소가 파손 내지 방화되고 경찰차량 6대 전소, 12대가 파손됐으며 경남도청, 중부세무서, KBS, MBC, 부산일보 등 언론사가 투석을 당했다<sup>49)</sup>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와 부마민중항쟁 기념사업회가 정리한 17일 시간대별 항쟁의 공격대상과 피해상황을 표로 다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48) 『자료집』, 72쪽  
 49) 『자료집』, 276쪽

<표 1> 시간대별 항쟁 피해 상황

시 간	참가인원	주요 공격 대상
7 : 25	·	충무파출소 박살·서부경찰서 투척·동대신파출소 박살
8 : 20	1천여명	초량 1파출소 습격
8 : 55	1천여명	동부경찰서 앞에서 경찰과 접전
·	2천 5백여명	중부세무소·서대신3동사무소 박살
·	·	제2대청파출소 박살
9 : 35	·	부산일보·KBS 응징 시청 앞에서 대대적인 격돌

결국 부산에서 항쟁은 주체에 있어서 야간이 되면서 시위대는 도시룸펜, 집객업소 노동자, 영세상인, 반실업상태 자유노동자, 무직자, 구두땀이, 식당종업원, 상점종업원, 고교생 등 도시하층민이 중심이 되어 시위를 주도했으며, 투쟁이 점차 고조되고 경찰과 군의 투입이 가시화되자 학생들은 대오에서 이탈, 이들이 투쟁을 주도했다. 바로 이 점이 항쟁 주체에서 드러나는 이질성과 상이성이다. 다음으로 봉기 의제와 투쟁 양식에 있어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구분되는 공권력, 언론, 실업조세 등이 제기되었고, 항쟁 양상도 파출소와 경찰차 방화, 파출소·언론기관·관공서 공격, 관공서, 세무서, 언론사에 대한 투석 등 이전 거리에서 시위와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도시하층민이라는 이질적인 타자 소수자들이 기존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사건—구체적으로는 봉기적 실천—을 통해 정치를 국가나 대의제·정당'으로 소환시키는 기존 정치와 구분되는 실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2. 마산

10월 17일 오후 5시 경남대 학생들은 3·15탑 앞에서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배님 못난 후배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우린 전국 대학생들이 유신헌법 철폐 시위를 벌일 때 학교당국의 농간으로 유신찬성 데모를 해버린 못난 후배들입니다”라는 취지의 묵념을 올리고 “독재타도” “박정권은 물러나라” 는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에 들어갔다.<sup>50)</sup> 5시 10분경 날이 어두워지자 시위대는 당시 시외버스 주차

장 뒷길을 따라 시내로 진출, 도로변의 벽돌담을 무너뜨리고 벽돌조각을 집어던지면서 폭력적이고 전투적인 시위로 전환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마산지역에서의 투쟁은 경남대에서 200여명 학생들의 투쟁에서 출발했지만 부산과는 양상이 달랐다.<sup>51)</sup> 오히려 마산은 처음부터 시위의 차원을 벗어나는 봉기의 길로 나아갔으며, 투쟁에서 학생들의 비중이 부산보다 취약했고, 대부분 요식업소 직원 군소업체 종업원 등이었다.<sup>52)</sup> 여기서 먼저 「마산지역 소요사건 제1차 발생보고서」에 근거해서 항쟁주체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의 사실여부를 증언과 일간신문과의 교차비교를 통해 알아보자.<sup>53)</sup>

보고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 20분에서 6시 20분 사이에 1백여 명에서 1천여 명으로 시위대 숫자가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극동다방 앞 50여 명, 희다방 5백여 명, 불종거리 2백여 명, 가야백화점 1천여 명이 있었다. 6시 40분까지 시민들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 보고서의 10월 18일 연행자 구분에는, 전체 297명 중 학생은 40명에 불과하고 공원 73명, 근로자 8명, 기타 남자 63명, 무직 남자 25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기타 남자와 무직 남자의 상당수를 시위 주도세력인 젊은 실업자나 빈민으로 간주한다면 마산 항쟁의 주도세력은 도시하층민들임에 틀림이 없다.<sup>54)</sup> 또한 같은 날 영장 신청자 명부에서 총 41명 중 공원, 종업원, 무직 등 도시하층민의 숫자가 21명에 이르는 것 역시 항쟁주체의 변화를 드러내 준다.<sup>55)</sup> 10월 19일 보고서에서도 소란자 177명 가운데 학생은 19명에 불과하고 노동 63명, 무직 56명, 기타 16명 등 연행자의 60% 정도가 도시하층민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 구속자 명단을 통해 보

50) 《한겨레신문》, 1988년 10월 19일자

51) 마산지역 학생들의 반유신 투쟁 준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자료집』, 278쪽, 《한겨레신문》, 1988년 10월 19일자.

52) 조갑제, 앞의 책2), 67쪽

53) 이 자료는 당시 《경남매일》 사회부 남부회 부장과 김현태 기자의 사건 취재록으로 『자료집』을 통해 공개됐다. 이들이 《경남매일》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馬山地域 大學生 騷擾事件 1·2次 發生報告書事」이고 또 하나는 「10·19 소요 사태 현황」과 「제2의 3·15」라는 이름의 메모형식의 보고서이다. 이 글에서는 이 4가지 보고서를 비교해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보고서에 관해서는 다른 증언과 교차 비교하면서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이하 앞의 자료는 「보고서 1」, 뒤의 자료는 「보고서 2」로 표기).

54) 「보고서 1」, 48쪽

55) 「보고서 1」, 49쪽

더라도 총 24명 중 대학생 3명, 고교생 5명에 비해 공원, 노동, 점원, 상업이 총 13인에 달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시간이 갈수록 항쟁의 주도세력이 광범위한 도시하층민들로 변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56)</sup> 몇 가지 증언을 첨부하면 “항쟁의 주체는 중국집 배달원, 술집 종업원, 노동자, 기층 시민들이었다.”<sup>57)</sup> “시위의 주체는 처음에는 학생들 같았는데 나중에는 술집 웨이터, 구두닦이 등이 많았습니다.”<sup>58)</sup> “대열의 선두는 거의 공원 등 시민이었고 손에 각목 등을 들고 단순무장을 했던 것 같다.” “그때의 시위대를 이끈 사람들은 학생들이 아니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괴성을 지르고 파출소 유리창을 다 두드려 부수고 불을 질러 버리는 사람들은 강패들이었으며, 10 대의 인쇄소와 철공소와 자동차 정비공장의 견습공들이었으며, 구두닦이, 술집 웨이터들이었다.”<sup>59)</sup>고 증언하고 있다.

한편 마산에서의 투쟁은 부산에 비해 그 강도가 더욱 격렬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파괴, 방화는 가히 밑으로부터의 대중봉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당시 일간신문에서는, “이번 소요의 특징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폭동에 가까운 소요였고 방화파괴 등이 자행됐으며 화염병, 각목 등과 사제총기(私製銃器)가 사용된 것이다”<sup>60)</sup> 혹은 “이틀 동안 학생 소요, 공공건물 등 방화·파괴. 시위 아닌 폭동에 가까운 사태 살상가능한 사제총도 사용...평양군중대회 개최, 북한 학생 반정부 투쟁 선동”이라고 보도했다.<sup>61)</sup> 정부측은 이를 외부 불순분자의 소행이자 폭력과 살상무기를 동반한 소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왜 마산에서 대규모 도시봉기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폭력행사의 대상과 이슈는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 앞서 제시한 「마산지역 소요에 대한 보고서」를 따라 투쟁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하나씩 따져나가고자 한다.

56) 「보고서1」, 57쪽, 「보고서2」, 65 쪽

57) 이선관 증언: 『자료집』, 216쪽

58) 양석우 증언: 『자료집』, 218쪽

59) 김명섭 증언, 『자료집』, 195쪽; 주대환, 「폐허 위에서 다시 싹튼 사회주의 운동: 70년대 학생운동, 부마항쟁, 한국노동당과 주대환위원장」, 『이론과 실천』, 창간준비 제 호(2002).

60) 《조선일보》, 1979년 10월 21일자 여기서 실제 사제총기 존재했는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 경찰 무기고의 경우 보존된 것으로 알려진 반면 한 증언에 따르면 “코어(Core, 중앙)에서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을 때 총소리 같은 게 났었다.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 사제총기를 쏘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강신형 증언: 『자료집』, 203쪽).

61) 《국제신문》, 1979년 10월 21일자

첫 번째, 공화당사와 경찰·과출소에 대한 공격이 대표적이었다 10월 18일의 경우 본격적으로 도시하층민들이 주도했던 양상은 저녁 시간부터였다. 특히 마산에서는 시위대가 신분을 감추기 위해 시내 소등(消燈)을 강제해 시위가 더욱 격렬해졌다.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증언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62)</sup>

어두워질 무렵, 7시쯤 2백명 가량 되는 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다시 중심지, 창동 불종거리로 돌아왔을 때에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가세하여 수천명이 되었다. 그리고서는 누군가 공화당사로 가자고 외쳤다. 모두들 오동동 공화당사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다 “불꺼라” 전등을 끄지 않은 길가 집으로는 돌멩이가 날아갔다. 불을 끄지 않은 차는 특히 자가용 차는 바로 헤드라이트를 발로 차서 깨버렸다. 곧 마산 시내에 암흑 천지로 변했다. 그리고 누구도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비로소 마산은 독재의 공권력이 맥을 추지 못하는 자유의 해방 공간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독재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7시 30분경부터 창동 네거리에서 10대 후반, 20대 초반 청년들이 중심이 된 선봉대는 시위대를 저지하는 경찰을 향해 빈 병, 돌멩이, 벽돌을 던지며 저항하기 시작했다. 특히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시위군중들은 쓰레기를 담은 리어카에 불을 붙여 경찰저지선에 밀어 넣기도 하고, 주위 공사장에서 가져온 각목을 휘두르기도 하면서 경찰에 맞섰다. 점차 시위의 주도권은 도시하층민의 손으로 옮겨지게 되고 저녁 8시경에는 “공화당사로 가자,” “공화당사를 때려 부수자”는 외침과 함께 시위대는 공화당사가 있는 산호동으로 몰려갔다. 시위대는 소방차 1대를 파괴하고 투석세례를 받은 공화당 사무소 주변의 일부 점포 셔터 5개와 대형 유리 50여 장을 파괴했다.<sup>63)</sup> 또한 수십 명의 행동적 청년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져다 공화당 집기와 서류, 현판에 뿌리고 불을 지르자 주위 군중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sup>64)</sup>

오후 8시 5분경 시위대는 양덕과출소를 습격하여 대형 출입문 2개, 캐비닛 3개,

62) 주대환, 앞의 글

63) 『보고서 1』, 42쪽

64) 『자료집』, 285쪽

책상 5개, 유리창 50장, 전화기 2대를 박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때 수출자유 지역 노동자 일부가 합세했다고 한다.<sup>65)</sup> 부마항쟁기념사업회의 증언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한 청년이 벽에 나란히 걸린 태극기와 박정희 사진 액자를 떼어내 대통령 사진 액자를 부수고 사진을 찢어버리고 태극기만 높이 치켜올리자 시위대는 “잘한다,” “박정희 물러가라,” “대한민국 만세”라고 환호성을 질렀다고 한다.<sup>66)</sup> 그러나 군중들은 일부의 “무기고를 부수자”는 선동에 대해 “야! 그건 놔두자”는 식으로 대응했다.<sup>67)</sup> 시위대는 다시 동성동에 있는 국회의원 박종규의 집으로 몰려가 “박종규 개새끼, 죽여라!”라고 외치면서 2층으로 된 호화주택을 돌팔매질로 박살냈다.<sup>68)</sup> 경찰서 공격 가운데 가장 극적인 것은 북마산파출소(오후 11시 30분)와 회원동파출소(오후 9시)에 대한 공격이었다.<sup>69)</sup> 시위대는 북마산파출소가 불이 나는데도 “죽여라!”고 고함을 질렀으며, 회원동파출소의 경우 파출소에 불기둥이 오르자 환호성을 지르며 동네주민들도 몰려나와 구경했다.<sup>70)</sup>

두 번째, 마산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부유층’에 대한 시위대의 공공연한 공격이었다. 10월 18일 저녁 8시경 대진분식 센터 근처 부림시장 상가 대형직물판매 센터의 셔터를 몇 명의 청년들이 부수려는 듯이 격렬하게 발길질을 했다. 그 이유는 이 상점들은 많은 재산을 가진 부유층들의 소유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다른 사례에서도 드러나는데 자동차에 대해 통화관제를 하면서 버스나 택시에 대해서는 말로 등화관제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자가용차, 관용차가 불을 켜올 경우 사정없이 헤드라이트를 박살내거나 차를 빼앗는 등 노골적으로 부유층에 적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도로변의 상들리에가 켜진 고급주택, 고층건물에 맹렬히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수기도 했다.<sup>71)</sup> 이는 도시하층민들이 평소에 얼마나 부유층에 대해 적대감과 증오감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항쟁이 경제안정화 정책의 결과 강화된 사

65) 「보고서 1」, 42쪽

66) 『자료집』, 285쪽

67) 1980년 사북탄광 광업 노동자들의 투쟁과 광주항쟁 초기에서도 드러나듯이 국가기구의 무기는 시민들에 의해 탈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창진 「광주민중항쟁의 발전 구조: 무장투쟁과 민중권력, 정대화(위음), 『민주민중항쟁연구』(사계절 1989).

68) 『자료집』, 289쪽

69) 「보고서 1」, 42~44쪽

70) 『자료집』, 290~291쪽

71) 『자료집』, 287쪽

회적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계급간의 적대감을 내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세무서에 대한 공격을 들 수 있다. 마산시청 맞은 편에 있는 세무서에 대해 시위군중들은 “부가가치세를 철폐하라,” “부가세를 없애라,” “잘먹고 잘살아라”고 외치면서 돌을 던졌다. 이는 일종의 조세저항이었는데 부마항쟁의 주요원인 가운데 하나는 세금의 과중한 징수였다. 1979년 부산 시민들이 낸 세금은 약 3,880억 원으로 1978년보다 32% 증가한 액수였다. 이는 보수적인 부산의 중심지 상인들까지 반정부 쪽으로 돌려놓았던 것이다.<sup>72)</sup> 이 점은 10·26 직후 김재규의 「항소이유보충서」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그는, “부마사태는…민란의 형태였다…그것은 체제에 대한 반항, 정책에 대한 불신, 물가고 및 조세저항이 복합된 문자 그대로 민란이었다”라고 말했다.<sup>73)</sup> 특히 경기침체의 가속화와 부가가치세의 무리한 과세는 중소기업과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됐고 더구나 부가세 확정 신고 마감일인 10월 25일을 며칠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이런 일련의 불만은 세무서 공격 시위대에 대한 시장 상인들의 지원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문사·방송국 공격을 들 수 있다. 10월 19일 8시경 시위군중들 사이에서 “MBC를 때려 부수자”는 고함이 터져 나왔고 경찰과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펴고 있는 MBC 앞의 저지선에서 격렬한 투쟁을 전개했다. 시위군중들은 관제언론의 상징 MBC에 돌을 던지며 건물 3층까지 유리창을 박살냈고 시위대는 여러 차례 돌을 던지며 방송국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sup>74)</sup> 이는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시민들의 주공격 목표는 공화당사, 과출소 등이었고 돌아오면서 마산시청과 세무서, MBC방송국에도 돌을 던지고 야유했다”<sup>75)</sup> 이상의 과정을 통해 파괴된 국가기구 및 마산내 재산의 피해상황을 표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표 3>과 같다.

72) 조갑제, 앞의 책(1), 105 쪽

73) 조갑제, 위의 책(2), 256 쪽

74) 『자료집』, 297쪽

75) 김명섭 증언: 『자료집』, 195 쪽

<표 2> 10월 18일 마산 시위에서 재산 피해상황

	피해 상황
남성 파출소	파출소 유리창 전파 소방차 1대 소방 지휘차 1대 반파
산호파출소	내부 전소 경찰 오토바이 1대 전소 자전거 4대 전소
북마산 파출소	유리창 전파 내부전소 순찰 오토바이 1대 전소
회원 파출소	내부 전소
양덕·역전·자산 파출소	기물 파괴 유리창 파손
시청, 우체국, 검찰청 법원	유리창 파손
우체국앞 공중전화 박스	유리창 박살
부림상가 일부	유리창 파손
구 시민약국	내부 파괴
중앙극장앞 자가용 승용차	20여대 유리창 박살
경찰서 앞 시내버스	버스 3대 파괴
김일규씨 카메라	강탈당함
대진 아파트앞 1톤 트럭	대진백화점 앞에 처박힘

\* 출처: 『보고서 1』, 『자료집』 46~47 쪽에서 제작성

<표 3> 10월 19일 마산시위에서 재산피해 현황

	피해 상황
전신전화국 공중전화	Box 파괴 2개소 유리 10여장 파괴
허민영 의원 사무실	유리 파손
남경 다방	서터 반파
코오롱 부띠끄	2층 유리 파손
세원 카메라	유리 파손
금잔디 미용실	유리 파손
국민회의대의원 창원 지역회	유리 파괴
향원다방	유리 파괴
몽고장유	유리 파괴
오동동 다리 신호등	파괴
포니 승용차	허민영 의원 것으로 추정 유리 파괴

\* 출처: 『자료집』, 57, 64쪽에서 재정리.

## IV. 도시 하층민의 타자화

1960~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하층민에게 도시는 중심부를 향한 욕망의 공간이자 대상이었으며,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다수를 끌어들이는 거대한 도가니 같은, 불가사의한 공간이었다<sup>76)</sup> 또한 도시는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일상성을 획득한 공간,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의 중심적 공간인 동시에 자본의 제도적 장치와 이데올로기에 복속된 공간이자, 자본의 욕망에 의해 다양한 층위에서 안정적인 수탈이 실현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특히 한국전쟁이 끝난 뒤 1950년대 서울과 도시는 어수선한 가운데 빈곤의 문화와 서구 문화가 공존하는 장이었다.<sup>77)</sup> 문학작품에서 드러나듯이 1950년대 도시거리는 ‘목적지 없는 방황하는 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전후 소설들 역시 암울함 속에서 희망을 붙잡고 사는 군중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서민들의 인정(人情)을 통해 삶의 동력을 긍정적으로 그리려고 했다<sup>78)</sup>

한편 4·19를 계기로 도시는 급격하게 그 의미가 변화했는데, 이를 2가지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한 가지는 근대적 도시·거리문화의 등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4·19라는 도시봉기의 대두였다. 학생, 도시민을 중심으로 발발했던 4·19는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정권에 대항했던, 주체의 측면에서 도시 구성원이 스스로를 능동적인 주체로 호명했던 전환기적 사건인 동시에, 1946년 대구인민항쟁 이후 최초로 도시 대중들이 특정한 목적 아래에서 집단적으로 움직였던 ‘새로운 정후’였다. 특히 도시군중의 집단적인 움직임은 그 형태가 데모이건 폭동의 형태이건 간에, 이후 권력에게 민감한 사안이 됐다.<sup>79)</sup> 그렇다면 이제 4·19를 기점으로 새로운 도시군중으로 자리 잡았던 도시하층민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4·19 이후 도시하층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였을까? 이 시기 무엇보

76) 정덕준, 「1970년대 대중소설의 성격에 대한 연구: 도시 생태학, 그 좌절과 희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제16집(2002), 84 쪽

77) 1950년대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백산서당, 1999).

78) 오창은, 『한국 도시소설 연구: 1960-197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2005), 59 쪽

79) 이하 내용은 다음의 줄고 가운데 일부를 수정해서 전제한 것이다. 김원, 「4월 항쟁과 민중(3): 민중과 결합하지 못한 ‘민중’운동」, 『진보정치』, 제56호(2001).

다 심각한 문제는 도시 실업과 빈곤 문제였다. 당시 보건사회부 노동국의 통계에 따르면, 실업과 무직자는 587만 명이었고, 전체 1천 260만 명의 노동력 보유인구 가운데 취업자는 678만 명에 불과했다. 그 주된 원인은 농촌 잉여 노동력을 제 2차 산업으로 전환할 경제적 방안의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대구에는 2천 8백여 개의 공장이 있기는 했으나 거의 멈춘 상태였고, 관련자들은 “막상 문을 닫자니 그럴 수도 없고, 조업을 하자니 온갖 애로에 죽을 지경”이라는 푸념으로 당시 상황을 표현했다. 이런 실업 문제에 대한 민주당 정권의 대안이 바로 ‘국토개발사업’이었다.<sup>80)</sup> 하지만 “뒷걸음질하는 경제제일주의”<sup>81)</sup>라는 한 신문의 힐난처럼, “먹을 것을 달라;” “일터를 달라”는 도시하층민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장면 정권의 실업자 정책은 과거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실업자 공약으로 민주당 정권이 운명을 걸고 추진했던 국토개발사업에는 4백억 원의 재정이 필요했는데, 이 대부분이 국내 자원이 아닌 미 잉여농산물로 충당되었기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녔다.

특히 도시하층민의 식량난을 대표하는 것이 ‘결식아동 문제’였다. 경북 지역에는 1961년 2월 말 당시 8만 9천여 명의 결식아동이 있었으며, 이 중 2만 4천여 명이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민족일보》 3월 11일자에는 「경북에서 본 4월 위기설 실업자 불만 겹쳐 동요의 빛 또렷」이란 제목 아래 “의무교육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라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뿐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작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굶어죽는 걸 봐야하겠는재”라는 극단적인 반응이 실리기도 했다. 이처럼 도시하층민에게는 실업, 식량부족 등 ‘빈곤에서의 탈피’가 가장 큰 욕망이었다.

하지만 당시 운동진영의 요구는 도시하층민의 욕구와는 ‘괴리’ 되어 있었다. 민중의 빈곤, 절량(絶糧) 문제 해결 등의 욕구는 학생 사회운동에게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됐다. “실업자의 일터는 통일에 있다”라는 구호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학생운동 내에서 민중생존권과 통일문제의 결합은 무매개적이고 기계적이었다. 당시 운동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의 탈출을 통한 민족자립경제라는 틀 안에서 대안을 제기했고, 이는 당시 민중의 요구를 통일운동, 자립경제 건설이란 프티 부

80) 국토개발사업은 수리, 조림, 소방사업 등으로 실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고 보릿고개에 접어들어 절량농가에게 양식을 주어 춘궁기를 극복한다는 목표 아래 실시됐다.

81) 《민족일보》, 1961년 2월 22일자

르주아적 방식으로 대안화시킨 것이었다.<sup>82)</sup> 이처럼 사회운동(그리고 저항엘리트들)과 도시하층민들 간의 ‘괴리’가 존재하는 조건 아래에서 박정희 정권의 ‘조국근대화’와 ‘빈곤 탈출’은 1960~70년대 초반에 걸쳐 도시하층민의 집단적인 욕구를 반영하는 대안 가운데 하나였다.

이와 같이 운동진영의 의제 속에서 부차화 됐던 도시하층민은 난민 캠프, 범법자, 폭력배, 강도, 노점상, 부랑민, 자유노동자, 매매춘 여성 등 도시의 ‘이질적인 타자’로 구성됐다. 바로 도시화는 도시하층민에 대한 폭력구조였으며 이들은 도시 위생학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영자의 전성시대>에 그려지듯이 도시하층민에 대한 태도는 ‘더러운 청소 대상’에 불과했다. “우리들 중대가 평정지역의 베프콩 잔비(殘匪)를 깨끗이 소탕질 했듯이”라는 비유에서처럼, 도시하층민의 주거지역과 사창가는 욕망의 도가니인 도시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도시하층민, 그 참담하고 절망적인 삶의 역설적 표현에 다름이 아니었다.<sup>83)</sup>

이처럼 도시하층민은 지속적인 불안정 상태이자, 중산층·소시민 등으로 묘사된 도시정상인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됐으며, 도시하층민이 정주하는 ‘변두리’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에서 배제된 불안정, 궁핍, 무질서, 비도덕, 비윤리적인 타락한 성벽으로 묘사됐다.<sup>84)</sup> 다른 한편 도시 사회관계의 공간적 분화와 차별화 역시 심화되어 갔다. 1970년대 들어서 ‘문화주택’(국민주택) 등이 보급된 이후 도시 내 중심-주변화가 가시화됐다. 단적으로 최일남의 소설 <노새 두 마라>를 보면, 새동네를 상징하는 문화주택이 새로 들어서면서 구동네(빈민촌)와 보이지 않는 갈등이 발생한다. 이른바 주거공간이 중심과 주변이란 ‘경계 짓기’를 조장했던 것이다. 조해일의 소설 <빨>에 등장하는 지계꾼이 바라본 한강 맨션아파트 역시 하층민이 경험

82) 이런 현상은 사회운동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흔히 ‘민족문학’(民族文學)으로 불리는 1960~70년대 이른바 저항문학은 당시대의 억압적 현실과 부조리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반체제 민주화운동이라는 흐름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도시소설 혹은 대중소설에서 묘사된 당대 도시하층민의 비루한 일상과 주변적인 삶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류희식, 『1970년대 도시소설에 나타난 ‘변두리성’ 연구 박태순·조선작·조세희 소설을 중심으로』,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2003), 27 쪽

83) 도시위생학의 대상으로서 도시하층민 문제는 광주대단지 부분에서 다시 다룬다. 정덕준, 앞의 논문, 87 쪽

84) 안남연, 「황석영 소설의 역사인식과 민중성 황석영의 1970년대 소설연구」, 『상허학보』 제3집 (2004), 514, 516 쪽, 류희식, 앞의 논문, 16 쪽

했던 도시내부 분화의 사례였다. 당시 한강 맨션아파트는 중산층, 공무원, 외국인 주거용으로 20평에서 80평까지 대규모 평수가 공급됐던 최초의 사례였다.<sup>85)</sup> 반면 1960년대 중반 상경한 도시하층민들이 자리를 잡았던 해방촌, 금호동, 옥수동 등은 정착지(定着地)라고 불린 끝이 없는 무허가 건물 마을이 형성되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바로 도시위생과 무질서한 도시하층민의 유사 공간에 집중을 막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도시하층민들의 정착지 이전이었다.<sup>86)</sup>

이처럼 도시 공간 내 중심과 주변이 명확해지는 1970년대에 ‘도시적 징후’ 혹은 ‘문제적 현상’이 대두됐고, 이런 징후가 극적으로 폭발했던 것이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이었다. 최근 국가기록보존소에서 비밀해제된 1971년 8월 11일자로 대통령에게 보고된 『보고서』(보고번호 제71-458호, 보고관 정종택)의 첫 페이지에서는 박정희가 8월 10일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을 도시폭동으로 간주, “主動者를 嚴斷에 處하라”는 메모를 남긴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건 발생 직후 주동자 처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주동자 12명을 포함해 총 22명이 집시법 위반과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구속됐다. 8월 10일 봉기가 일어난 직후 검거된 12명 중 10대가 7명이었고, 최고령자가 33세였으니 광주대단지에서 일어난 도시봉기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8월 10일 당시 도시하층민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주민궐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양택식 서울 시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제일교회 목사였던 전 성천의 주도 하에 조직된 시정대책위(후일 투쟁위원회로 변경) 조차 이날 3만여 명이 넘는 군중이 모일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당시 상황을 몇 가지 기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87)</sup>

잔뜩 찌푸린 하늘에서 간간이 비가 내렸다. 성남출장소 뒤편 산비탈 오전 9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남녀가 뒤섞이고 어린애들도 눈에 띄었다. 10시가 지나자 발 딛을 틈이 없었다. 3만, 5만, 6만...헤아릴 수가 없었다. 인산인해였다...여기저기 널려진 진흙탕 구덩이마다 발이 빠지고 흙물이 튀어 올랐지만 누구도 개의치 않았다.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는 하늘을 무너뜨릴 듯

85) 오창은, 앞의 논문 70, 83 쪽

86) 광주대단지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손정목, 「광주대단지 사건」,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 2』(한울, 2005), 86-95 쪽

87) 「그해 여름 무슨 일이 있었을까?(1): 광주대단지투쟁을 말한다」, 《성남뉴스》, 2002년 8월 5일자

했다. 적잖은 사람들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삽, 곡괭이, 몽둥이었다.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는 각오였다. 군중 속에 스무살 쯤 돼 보이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곡괭이를 들고 있었다. 생기를 찾아볼 수 없는 바짝 마른 얼굴이었지만 눈빛에선 불이 타는 듯 했다. 분노에 찬 듯 악을 쓰는 목소리로 그가 구호를 외쳤다. “일자리를 달라!” 순식간에 사람들이 따라 외쳤다. 이 날 누구랄 것도 없이 구호를 선창하면 모두들 따라 외쳤다.

입주중 전매금지 조치, 건물취득세 등 정부 정책에 항의해서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은 사건 당시 외쳐졌던 “허울 좋은 선전 말고 실업군중 구제하라,” “백원에 뺏은 땅 만원에 폭리 말라,” “살인적 불하가격 결사반대,” “배고파 우는 시민 세금으로 자극 말라, 이간정책 쓰지 말라” 등을 통해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바로 강제 이주된 도시하층민에 대한 차별, 빈곤과 실업, 납 조세저항 등이 결합된 도시봉기였다.

도시봉기를 야기한 원인은 당시 정권과 관료기구의 도시하층민에 대한 담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초 서울시 행정당국자들은 서울시의 판자촌에 대해 “서울시가 온통 시커먼 루핑 지붕을 얹은 올망졸망한 판자촌으로 뒤덮이지 않을까”라고 서술하고 있다. 광주는 정부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만든 ‘구빈원’에 다름이 없었다. 어처구니 없었던 점은 서울시가 “인구 10 만 명만 모아놓으면 어떻게 해서든 뜯어먹고 산다”는 기막힌 발상을 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착지에 이주한 도시하층민들을 ‘비정상인’, 인간 이하의 ‘주변계급’이라는 말을 흘리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를 보면, “광주대단지 바깥에선 언론이 단지 사회에 대한 억지소문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었다. 사회에 뒤쳐진 놈들이 민둥산에 떼거리로 몰려 우글거리는 곳이라고 허구헌 날 술이나 먹고 싸움이나 하고 일도 안 하는 놈들이라고”<sup>88)</sup> 이는 국회 입법조사관인 이상민의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한 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한데, “유독 못 사는 철거민만을 이주시키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 아닌가? 그 이유는 첫째, 못 사는 다수의 민중을 한 곳에 결집시켜 놓으면 반란 세력을 구축하기 용이하고 폭동의 興起가 쉽다는 점도 있다”는 것이다<sup>89)</sup>

88) 위의 기사, 「『광주대단지』 재조명한다」, 《성남뉴스》, 2001년 10월 9일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도시하층민 밀집 주거지=사회불안 요소’라는 간주됐다는 사실이다. 당시 성남 주민교회 관련자였던 이해학은 광주대단지 사건과 관련해 ‘국가 안보적 측면’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1970년대 월남전에서 빈민촌 게릴라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도 196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 도시빈민 형성을 사회적 문제로 사고했다는 것이다. 이는 박정희가 광주대단지 사건을 바라본 시각 즉, 도시폭동으로 바라본 시각과 일치했다. 정권이 주모자 구속 등 강경조치를 취했던 이유는 1946년 대구 10월 항쟁 4·19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 있었던 도시봉기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4·19 이후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존재했지만, 학생시위의 연장이었지 도시하층민 등이 주도한 봉기적 형태는 결코 아니었다. 정권 으로서는 서울 바로 위에 휴전선이 그어져 안보적 위험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서울 턱밑에 화약고를 더 떠 안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sup>90)</sup>

결국 부마항쟁도 1970년대 이후의 도시적 징후와 그 내부에 존재하던 도시하층민의 모순적 존재조건 속에서 배태됐다. 야간시위에서 도시하층민의 주도성과 전투적·집합적 폭력은 세제, 관공서, 언론, 억압적 국가기구, 부유층 공격이라는 형태로 표출됐다. 그러나 결정적인 도시하층민들에 의한 도시봉기의 기원은 박정희 시기 도시화에 따른 하층민의 주변화와 배제였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주어진 도시화와 근대화 순응하던 태도에서 점차 이탈하여 탈구된 욕망으로 인한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광주대단지나 부마항쟁과 같은 ‘봉기적 실천’을 벌였다. 바로 도시하층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 이른바 타자화라는 ‘새로운 현상’, 경공업 중심의

89) 이상민, 「빈민집단의 사회정책적 성격」, 『정경연구』 1971년 10월(1971), 31쪽(강조는 인용자).

90) 바로 광주대단지 사건은 ‘안보적’ 의제로서의 성격이 크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도시빈민문제가 곧바로 사회문제화가 되기에 이르렀고, 서울 거주 도시빈민의 전격적인 광주로의 강제이전 결정은 김현옥 시장 개인의 행정 스타일 이라기보다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도시빈민이 위험시되자 강제적으로 빈민을 관리하기 위한 ‘집단지동’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특히 월남전 직후 베트남의 빈민촌 게릴라 투쟁방식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자, 정부는 이를 남한의 대도시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보안사에 근무했던 한 행정학 박사가 「성남시 형성에 대한 안보적 효과」라는 논문도 발표했으며, 1980년 광주민중항쟁과 관련해 열린 1988년 국회청문회에서 이해찬의 질의에 대해 당시 진압담당자는 전라도 광주가 제1의 봉기지라면, 경기도 광주는 제2의 봉기예상지라고 당시를 회고했고, 실제 경기도 광주지역에 계엄군의 20%가 파견됐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이는 2001년 8월 10일 8·10사건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나온 토론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유사한 내용은 손정목, 「광주대단지 사건」,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 2』(한울, 2005), 113쪽 참조.

노동집약적 제조업 도시인 부산과 마산에서의 폐업·부도와 실업난 등 사회적 양극화, 경제위기의 부담을 도시하층민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의 조세저항 등이 결합된, 체제의 질차성으로 ‘환원 되지 않는 박정희 체제의 복합적인 모순을 반영한 도시봉기가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도시하층민들이 사고했던 ‘정치였다

## V. 결론: 대중독재론과 도시하층민의 ‘정치’

박정희 시기 대중독재를 둘러싼 중요한 쟁점들은 대중독재론이 박정희 시기 지배 메커니즘 해명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또 대중독재론이 당대 대중의 존재와 주체형성을 설명하는데 기여한 바를 둘러싼 것이었다. 특히 최근에 전개된 논쟁들이 이른바 박정희 시기를 대중독재로 파악할 수 있느냐 여부를 둘러싼 비판·반비판을 보며 드는 생각은 이들 논쟁이 ‘절반의 진실’이 아닌가란 것이었다. 독재에 ‘동의하는 대중’을 강조했던 대중독재론을 ‘저항하는 대중’으로 ‘경험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같은 지평 하에 있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그것이다.<sup>91)</sup>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대중독재론은 한국 민족주의 역사학이 전제하는 ‘통합된 주체’로서 민족(혹은 전민족적 저항)에 대한 반박의 형태로 제기되었다. 더불어 근대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란 맥락에서 제기되어 왔다. 바로 근대의 이탈이 아닌, 근대적 지배형태로서 독재(또는 파시즘)에 대한 대중들의 열광, 적극적인 동의를 부각시키기 위한 논쟁 지형 아래 대중독재론은 서 있는 것이다.<sup>92)</sup> 최근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2006년 4월 14일) 토론회 직후 정리된 바에 따르면 이하와 같다.<sup>93)</sup>

91) 그간 논쟁에 대해서는 임지현·이상록, 2004, 「‘대중독재’와 ‘포스트 파시즘」, 『역사비평』, 2004 가을호(2004); 조희연, 「박정희 체제의 복합성과 모순상 임지현 등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역사비평』, 2005 봄호(2005); 임지현, 「대중독재 테제」, 『대중독재 2』(책세상 2005), 602, 612~613 쪽 등을 참조.

92) 임지현, 「‘대중독재’의 지형도 그리기」, 임지현·김용우(편), 『대중독재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책세상, 2004); 임지현, 「민중, 희생자인가 공범자인가 파시즘의 진지전과 합의독재」 『당대비평』 2000년 가을호(2000) 등을 참조.

93) 장문석, 「왜 다시 대중독재론인가」, 《한겨레21》, 2006년 4월 25일자.

근대 독재들은 통상 억압과 폭력의 악마적 이미지들로 채색되었으나 실제로 그것은 위로부터의 강제적 동원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동원 체제를 구축했으며, 나아가 대중의 광범위한 동의 기반을 향유했다. 이는 곧 대중이 독재에 연루되고 심지어 그것과 공모했음을 암시하며, 따라서 소수의 사악한 가해자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라는 도식은 순진함을 넘어 허구적이기까지 하다. 이런 도식을 고집하는 한 독재가 정치적 파산 선고를 받았음에도 독재자에 대한 향수가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모순적인 현실을 설명할 길이 없다. 독재를 진실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단순히 비난하기에 앞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대중독재 주창자들은 민족주의와 근대적 지배로서 독재를 둘러싼 이분법적인 문제설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오히려 대중독재론을 ‘보편화’ 시키려는 것은 아닌가란 의구심이 든다. 근대적 지배는 동의와 저항이 동시에 따라왔으며, 대중독재론은 억압이라는 독재의 한 면 만이 아닌, 독재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답하는 ‘대중’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대중독재론은 ‘의도적으로 논쟁을 동의 저항이나 라는 스스로 비판하고자 했던 근대적인 문제설정에 함몰되었다.’<sup>94)</sup> 중요한 점은 대중독재론은 스스로를 가두는 이분법적 문제설정이 아니라, 저항과 동의라는 설정 자체를 이론적이고 역사적으로 ‘문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대중독재론에서 중요한 대중 혹은 민중이라고 불리는 지배체제와 관련을 맺는 집단은 통일적이며 균질적인 집단이 결코 아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상이하게 제기하는 실업, 빈곤, 조세 문제나 폭력과 봉기적 실천, 시민과 정상인들과 대조되는 위험대상으로서 비윤리성과 비도덕성, 부유층에 대한 섬광 같은 분노 등이 하나의 예이다. 이처럼 이들은 매우 이질적이며, 지역, 젠더, 계급 등의 범주에 따라 과잉 결정되는 비대칭적인 집단이다. 이들을 대중과 민중으로 불러온 기존 한국 현대사 해석의 ‘근대적인 문제 설정’ 자체를 문제시할 때 대중독재론이 스스로 제기했던 근대적 지배에 대한 비판은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

단적으로 민중이란 용어-담론은 1970~80년대 시기에 따라 다소 의미와 결이

94) 그 외에도 대중독재론 안에는 사회관계의 물질성, 적대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차화-생략되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달랐지만, 당대 담론 생산자층—아마도 저항적 지식인층—이 스스로(혹은 자신의 역사성)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정체성을 지닌 ‘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통합-배제하려는 일련의 정치적 기획 가운데 하나이다<sup>95)</sup> 예를 들어 “도대체 민중이나 하층민, 거리의 양아치가 뭐가 다르냐?”든지, 혹은 “부산과 마산에서의 투쟁에서 도시하층민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당대 지식인-대학생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지?” 또는 “지식인의 반독재민주화운동과 도시하층민의 투쟁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수렴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혹은 “국가가 개인(대중—인용자)을 국민, 민족 혹은 계급으로 호명하고 개개인이 그 부름에 자발적으로 응할 때 이들은 이미 지배계급의 헤게모니에 종속된 것이 아닌가?” 등의 질문이 그것이다. 이들 질문 속에서 여전히 이질적 주변인과 소수자들은 ‘통합되어야 하는’ 강박적인 대상 혹은, ‘지식인 저항엘리트들과 관계 속 혹은 전체 민중-민중 운동의 ‘부분’으로서)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타자’로 간주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을 대중이나 민중이라고 ‘명명’하는 문제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매우 이질적이며 상이한 주체들을 ‘민주화운동’이나 ‘민중운동’이라는 단일하게 통합된 주체로 여기고, 이들을 ‘독재에 공모한 대중’ 또는 ‘민주화운동’ 혹은 ‘민중운동’이라고 부르는 ‘언어 구조’ 자체가 부산과 마산에서 존재했던 이질적인 도시하층민을 ‘타자’로 남겨두고자 하는 지식인들의 ‘의식적 욕망’의 산물이다.

따라서 기존 박정희 시기 연구가 지닌 근대적 문제설정을 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방식 가운데 한 가지가 대중이나 민중 혹은 민주화운동이란 언어가 아닌, 이질적 소수자, 사회적 타자, 주변부 사회집단의 ‘환원불가능한 주체상’들을 이론적으로 탐구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말했지만 대중독재론과 그 반론은 서로 문제제기를 통해 서로가 상정한 ‘이분법적 문제 틀’을 거스르려고 했지만, 결국 양자간의 논쟁과 토론은 ‘근대적 틀’ 안에서 작동하는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잠정적이지만, 현재 논쟁 지형 내에서 대중독재론(과 그 반론들)이 과연 다른 인식 기반에 있는 것인지 회의적이며 비록 ‘대중’과 ‘독재’ 그리고 ‘저항’과 ‘민주화’ 등 방점이 다르지만, 양자 모두 근대적 지배질서 하에서 주체형성의 메커니즘에 대한 좀더 진전되지 못한 논의들이라고 판단한다. 이제 ‘질문 자체’를 바꾸어서 기

95)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책세상 2005), 62~64 쪽

존에 박정희 시기를 연구하던 범주와 용어, 개념 자체를 문제시하면서, 이 시기 이질적이고 중층적인 주체들이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보편적 주체—대중, 민중, 계급 등—를 만들어 가던 지식구성 과정 자체를 ‘해체적으로 재독’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다. 전쟁미망인, 기지촌 여성, 버스차장, 구두담이, 앵벌이, 매매춘 여성, 혼혈인, 화교, 도시하층민 그리고 현재화된 이질적 소수자들을 둘러싼 문제가 그 중요한 매개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부산과 마산의 도시봉기 과정에서 드러났던 대중, 민중이나 계급으로 회수불가능한 주체로서 ‘도시하층민’에 대한 본 연구는—여전히 상당수 용어와 담론들은 근대적 틀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나—이질적인 이들이 사고하고자 했던 ‘정치’를 불러 들여왔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편적인 설명을 근본적으로 문제시하고 있다.<sup>96)</sup>

## 참고문헌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제신문》, 《민족일보》, 《성남뉴스》.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서울 백산서당 1999.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서울: 책세상, 2005.

김석준, 「부산지역의 계급구조분석 시론」. 『공동체를 위하여』 동보, 1986.

김원, 「4월 항쟁과 민중(3): 민중과 결합하지 못한 ‘민중 운동」. 『진보정치』 제56호, 2001.

김창진, 「광주민중항쟁의 발전구조: 무장투쟁과 민중권력」. 정대화(역음), 『민주민중항쟁연구』. 서울: 사계절, 1989.

96) 라자뤼스는 정치를 외재적인 것이 아닌, 주체의 내재성으로부터 찾고 있으며 동시에 개별성에 대해 천착하고 있다. 그에게 개별성이란 ‘사건’—사건이란 사회의 기존상태를 벗어나는 것—, 바로 개별성을 지닌 ‘사건’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이처럼 주체성을 주체성 내부로부터 설명하는 것은 합리적 국가, 정당의회주의의 체계모니를 비판하기 위한 사고로서의 정치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이는 필연적으로 총체성(계급주의, 의회주의)에 대한 거부와 완전히 새로운 정치질서를 위해 새로운 사고의 질서로서 정치를 전유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국가(권력)을 매개로 통합적·보편적인 주체를 근간으로 정치를 소환시키려는 것이 아닌, 이질적인 타자·소수자들의 기존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사건—이 글에서는 도시 봉기적 실천—은 ‘정치=국가, 계급, 대의제·정당’으로 소환시키기 위한 정치적 기획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라자뤼스, 『이름의 인류학』(새물결, 2001) 참조.

- 김하기, 『부산민주항쟁』.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 라자뤼스, 『이름의 인류학』. 서울: 새물결, 2001.
- 류희석, 『1970년대 도시소설에 나타난 ‘변두리상’ 연구: 박태순·조선작·조세희 소설을 중심으로』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2003.
- 박철규, 『5·18 민주항쟁과 부마항쟁』. 『5·18은 끝났는가』. 서울: 푸른숲, 1999.
-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마항쟁 10주년 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1989.
-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거역의 밤을 불사르라 10월 부마민주항쟁사』. 1985.
- 손정목, 『광주대단지 사건』.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 2』. 서울: 한울, 2005.
- 손호철, 『1979년 부마항쟁의 재조명: 정치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방60년의 한국정치』. 서울: 이매진, 2006.
- 안남연, 『황석영 소설의 역사인식과 민중성: 황석영의 1970년대 소설연구』. 『상허학보』 제3집, 2004.
- 오창은, 『한국 도시소설 연구: 1960~197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 윤소영,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개론』. 서울: 공감, 2006.
- 이상민, 『빈민집단의 사회정책적 성격』. 『정경연구』 1971년 10월호, 1971.
- 이수연, 『부마사태의 전모를 밝힌다』. 『신동아』, 1985년 5월호, 1985.
- 임지현, 『‘대중독재’의 지형도 그리기』. 임지현·김용우(편), 『대중독재: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 서울: 책세상, 2004.
- 임지현, 『대중독재 테제』. 『대중독재 2』. 서울: 책세상, 2005.
- 임지현, 『민중, 희생자인가 공범자인가: 파시즘의 진지전과 ‘합의독재』. 『당대비평』 2000년 가을, 2000.
- 임지현·이상록, 『‘대중독재’와 ‘포스트 파시즘』. 『역사비평』 2004년 가을호, 2004.
- 임혁백, 『시장, 국가, 민주주의』. 서울: 나남, 1994.
- 임현진, 『다시 보는 부마항쟁: 잊혀진 민주화의 유산과 역사적 의의』. 『사회이론과 사회변혁』. 서울: 한울, 2003.
- 장문석, 『왜 다시 대중독재론인가』. 『한겨레21』 2006년 4월 25일자.
- 정근식, 『한국민주화와 부마항쟁』. 부마항쟁 20주년 기념사업회,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1999.
- 정덕준, 『1970년대 대중소설의 성격에 대한 연구: 도시 생태학, 그 좌절과 희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제16집, 2002.
- 조갑제, 『有故!(1)·(2)』. 서울: 한길사, 1991.
- 조희연, 『박정희 체제의 복잡성과 모순성: 임지현 등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역사비평』 2005 봄호, 2005.

주대환, 「폐허 위에서 다시 싹튼 사회주의 운동: 70년대 학생운동, 부마항쟁, 한국노동당과 주대환 위원장」, 『이론과 실천』 제4호, 2002.

주태산, 『경제 못 살리면 감방 간대야: 한국의 경제부총리, 그 인물과 정책』 서울 중앙M&B, 1998.

편집부(편), 『70년대 한국일지』 서울 청사, 1984.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부마항쟁」, 『1970년대 민주화 운동(IV)』, 서울: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1986.

홍스봄, 『원초적 반란: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유럽소외지역 민중운동의 제형태』 서울 온누리, 1984.

황한식(역음),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에 관한 연구』, 부산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연구센터, 1982.

### 국 문 요 약

1979년 부마항쟁은 1970년대 후반 도시하층민의 모순을 드러내는 밑으로 부터의 도시봉기였다. 그간 부마항쟁은 학생운동이나 민중운동사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거나, 민주화운동이라는 맥락에서 해석되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첫 번째로, 도시봉기를 민중·민주화운동으로 통합·수렴시켜 해석하려는 경향이 지니는 문제점에 주목했다. 두 번째로는 부산과 마산의 도시봉기 분석을 통해 ‘대중독재론’과 ‘반론들’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대중독재론이 능동적인 주체로 상정하는 대중이나 민중은 통일적이며 균질적인 집단이 아닌,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집단들이다. 따라서 주체성 형성을 둘러싼 ‘근대적인 문제 설정’을 문제시할 때 대중독재론의 근대적 지배에 대한 비판은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부산과 마산의 도시봉기 과정에서 드러났던 민중이나 계급으로 환원불가능한 주체인 도시하층민의 봉기를 통해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주체들이 사고하고자 했던 ‘정차’를 불러내고 대중독재론과 그 반론들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문제시하고자 한다.

● 투고일 : 2006. 4. 10.

● 심사완료일 : 2006. 5. 29.

● 주제어(keyword) : 부마항쟁(Pusan-Masan resistance), 도시하층민(urban lower group), 도시봉기(urban uprising), 대중독재(mass dictatorship), 도시화(urbanization)